

김해신공항 결정과정 검토결과 (요약)

민선 7기 부울경 시도지사의 동남권 상생협약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추진 T/F를 운영한 결과, 김해신공항은 거점공항 기능으로 계획되었고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밝혀져 정부정책의 변경을 요청함

- 위법성 : 군공항 및 민간공항 관련법 미 적용, 5개시도 합의로 결정된 과업지시서 준거기준 미 준수 등

□ 김해신공항의 기능 검토결과 :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

○ 지역에서 김해공항의 안전, 소음, 용량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, 김해신공항을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한 것이 밝혀짐

- 사타예타(거점공항) : 국토부 발표(2016.6), 비행시간제한(23시~06시), 비행절차(CAT I), 활주로 규모(E급 항공기), 항공수요 축소(중장거리 노선 미반영) 등
- 대선공약(동남권 관문공항) : 안전한 24시간 공항, 인천공항 재난시 대체공항 기능
※ 국토균형발전차원의 중장거리 노선의 취향이 가능한 공항 등
- 국토부(영남권 관문공항) : 예타 통과 이후 국토부(장관 강호인) 발표(2017.4)

□ 김해신공항의 정책결정 과정 검토결과 : 관련법 위반 및 합의사항 미준수

○ 김해신공항 입지결정의 기준인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관련법을 미적용 했고 5개시도 합의로 결정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아,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함

- 관련법 위반 :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(비행안전표면)과 항공법 82조(장애물 제한표면) 미적용
- 사타 과업지시서 준거기준 미적용 : 관련법 및 지침 미적용, 소음 등의 현장 조사 미 실시 등

- 김해신공항의 사타 계획안 검토결과 : 안전, 소음, 확장 등 문제
 - 신공항의 필수조건인 안전, 소음, 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김해공항의 시설 및 운영 기준보다 못한 기준으로 분석하여, 안전문제와 소음영향, 향후 확장성 등에 대한 문제 발생
 - 안전문제 : 관련법 미적용에 따라 신설활주로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
 - ※ 인천공항, 제주제2공항 등은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 절취를 전제로 함
 - 소음문제 : 현장조사 미 실시 등으로 소음영향 축소 및 왜곡
 - ※ 소음영향권에 있는 신설 아파트(푸르지오, e-편한세상 등 약 2천 세대) 등 미 조사
 - 확장문제 : 현황과 다른 과도한 SLOT 기준 적용,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계획 미 제시
 - ※ 인천공항 SLOT(활주로 3분의 시간당 이착륙 횟수) 63회에 비해 높은 74회를 적용

□ 검토결과 및 정책제안 : 법위반 등으로 정부정책 재검토, 추진협력단 설치

- 동남권 신공항 추진 T/F의 검토결과, 정부 국책과제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제시된 대선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, 관련법 위반 및 과업지시서 미 준수 등으로 안전, 소음, 확장 등 신공항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획으로 판단
 - 관련법 위반, 현장조사 미 이행 등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은 수용성 부족
 - 특히 정부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김해신공항 건설로 왜곡 홍보하여, 지역 주민에게 잘못된 기대감과 불필요한 논의를 야기함
-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명확히 밝히고,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경시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정책을 변경하여 국토균형발전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‘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’ 건설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
 -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협력단 설치(일본 주부공항 사례)
 - ※ 지방정부 시대에 지역 중심의 신공항 계획 수립 및 건설, 정부는 지원
 - 인천공항 재난시 대비와 하늘 길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문공항 건설